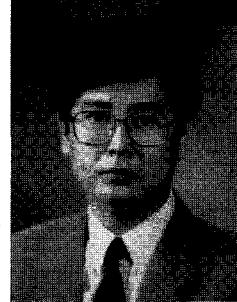


2001년도 산업물류 혁신시책



유통서비스정보과장 김경식

▷ 새천년의 화두 : 물류혁신의 열풍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국내산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중의 하나는 바로 물류문제일 것이다. 물류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유난히도 지난해에는 국내물류의 실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당연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논의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일찌감치 물류를 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물류혁신을 추진해온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국내 산업계에도 도도한 물류혁신의 열풍이 일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MF 한파와 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 기업들은 그간 기업경영의 사각지대에 있던 물류프로세스의 개선이 없이는 무한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더 이상의 생존과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개별기업 차원의 물류혁신 노력과 더불어 제조-유통-물류 등 공급체인 전반의 물류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SCM관점에서 기업의 물류관리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다. 나아가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기업의 물류프로세스에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가 전자적인 방식으로의 대체할 수 없는 물류흐름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상거래와 오프라인 물류흐름간의 시간적 겹을 최대한 단축하고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비지니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 물류혁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

새천년에 일기 시작한 물류혁신의 열풍과 물류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에 비해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있는 도로·철도·항만 등 SOC시설과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다만, 물류인프라 확충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물류

부문에 대한 지원시책은 물류표준화·공동화·정보화, 지식기반형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등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소프트 물류혁신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주기업 차원에서는 자사물류체제에서 탈피하여 전문물류업체나 물류솔루션업체에 대한 과감한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해 나가는 동시에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급체인내 기업간 또는 관련기업간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류혁신을 위한 상당부분의 역할은 물류기업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SCM 및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기업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특정기업 또는 산업에서 요구되는 맞춤·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진 물류기술 및 노우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하주기업 또는 공급체인 전체의 물류문제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물류컨설팅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거의 모든 하주기업이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업체는 EDI, GPS, TRS 등 IT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물류업체간 또는 하주-물류업체간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산업물류 혁신시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산업자원부의 물류정책은 산업지원기능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물류의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핵심역량의 확충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는 상품의 최초 발생부터 최종 소비·소멸에 이르기까지 조달·생산·유통·정보 등 모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산업의 동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의 지식기반화·고도화는 물류의 지식기반화·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산업물류정책의 필요성과 그 정체성(identity)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혁신시책은 물류혁신기반의 조성, 효율적인 첨단·선진물류체계의 구축, 지식기반 물류서비스의 제공을 그 중심과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 마련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 2001년 산업물류 혁신시책

(1)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기반의 확산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약 2,000여 기업의 물류표준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년중 유니트로드시스템 통칙상의 물류장비·기기·포장 규격을 전면 재정비하고 「물류표준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파렛트 등 표준물류장비를 제조·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유통합리화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대상에 표준물류바코드 도입사업을 포함하고, 필름마스터 무상제공 기한은 2001년까지 연장하여 EAN-14 및 EAN-128 등 표준물류바코드의 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e-로지스틱스의 기반인 전자카타로그 표준화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전자카타로그 표준화 기술위원회(2000.10.17 출범)」를 중심으로 상품분류체계, 특성항목, 코드체계 등에 대한 공통의 「전자카타로그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1년 상반기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우선 가공식품·생활용품 분야에서 2002년까지 1만 7,000여개사의 50만개 품목의 전자카타로그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한편, 기업간 물류공동화사업의 확산을 위해 금년중 유통합리화자금 약 320억을 활용하여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도심내 택배화물수요를 고려하여 택배전용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2) 물류시설 및 물류정보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지난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물류시설 및 물류정보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금년부터 시행된다.

첫째, 2000년말 종료예정인 물류시설 투자세액 공제(3%) 시한이 2003년말까지 연장된다.

둘째, 전자상거래 관련(e로지스틱스 구현을 위한 정보화 투자 포함) H/W, S/W, 컨설팅 투자시 투자액의 일정비율(대기업 3%, 중소기업 5%)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시행된다.

셋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업체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수입금액에서 POS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2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3) 지식기반형 선진 물류시스템 기반 구축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물류신기술 개발사업(2000년 4개 중소·벤처기업에 5억원 지원)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첨단 물류기술 및 혁신기법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지속적으로 고취시켜나갈 방침이다.

국내물류업체와 외국의 선진물류업체간 기술제휴, 영업제휴, 합작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국내 물류기술 및 관리기법의 고도화가 제고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는 SCM관리 전과정에 걸쳐 물자와 정보의 흐름에 대한 지식과 분석력을 갖춘 양질의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4) 제3자 물류중심의 물류산업 합리화·고도화 촉진

앞으로 물류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물류혁신 효과가 보다 많은 기업들에 확산될 수 있고 물류산업의 합리화와 효율화가 큰 전문물류업체 지원체계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기금 등에 의한 공동창고, 물류센터건립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물류전문업체가 주도·참여하는 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자가 물류에 비해 영업물류가 받는 불리한 법·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하주기업이 물류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고 물류업체와 전략적 제휴 등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물류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전문물류 시장수요를 확충하는 유인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방(front-end)비지니스 프로세스 개선 못지않게 물류 등 후방(back-end)비지니스 프로세스 개선에도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업종별 B2B 시범사업 등을 추진·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물류 등 후방의 비지니스 개선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며, 제3자 물류 등 전문물류업체가 전자상거래 업체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데에도 정책적 지원노력을 다할 것이다.